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한 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2/ 3/ 2 통권 1560호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CEO는 없는 듯 있다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22.2.15(화) 공포·시행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중 회계사 :
- 외부회계감사는 공익보호가 최우선으로서 감사위험을 제거하는 방법 예시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미사용자산 및 유해자산의 감가상각방법
-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22.2.15(화) 공포·시행
- 주택 유형별 세 부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 사주 지배 현저법인을 이용한 부자탈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등 전격 조사착수
-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가 강화됩니다
- 2021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기계장치 임대하거나 수탁가공업체에 설치한 경우는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p.13)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관련 개정사항 >

개념, 구분		2021년까지	2022년부터
개념 정의	1세대	본인 +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 공유하는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 (30세 이상, 배우자 사망, 이혼한 경우는 배우자 없어도 1세대 임)	
	1주택	주택 소유권 등기후 2년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만 적용	
비과세 기준금액		9억원(21년 12월 7일 이전)	12억원(21년 12월 8일부터)
주택부분 부속토지 (비과세 면적)		주택정착면적 × 5배수 내	주택정착면적 × 3배수 내 (축소됨)
고가경용주택 (상가주택)		5배 이내 토지 비과세 5배 초과분 : 일반토지로 과세	주택정착면적 3배 이내 : 비과세 3배 초과분 : 비사업용으로 과세
주택면적 > 상가면적 → 전체를 주택으로		상가부분 토지도 비과세	상가부분 해당 토지는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이상 80%(보유기간별 공제율 최대 40% + 거주기간별 공제율 최대 40%) (각 1년당 4%)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주 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60호 / 주간 9호

2022. 3. 2.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주) 안세회계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관련 개정사항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외부회계감사는 공익보호가 최우선으로서 감사위험을 제거하는 방법 예시	2
C E O 에 세 이	CEO는 없는 듯 있다	4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스그램 전용계좌 관련 문의 - 계약에 의한 객실 추가 보상비 - 수출품 소급 - 관계회사간 거래	6 7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미사용자산 및 유류자산의 감가상각방법	8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상중세법상 주식가치 평가액 -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10 11
직 장 인 Survival	일 잘하는 사람들의 자기관리 방법 9가지	12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그 종사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는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됨 (서면법안-3764, 2021.06.29) -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전담 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서면법안-2573, 2021.07.20)	13 14
세 정 뉴 스 와 해 설	"유류세 인하 연장 내달 결정... 연장 불가피할 듯"	14
마케팅 Tax consulting		13
세 무 정 보	-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22.15(화) 공포·시행 - 주택 유형별 세 부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 사주지배 현지법인을 이용한 부자탈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등 전격 조사착수	16 20 23
회 계 정 보	-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가 강화됩니다 - 2021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38 42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22

외부회계감사는 공익보호가 최우선으로서 감사위험을 제거하는 방법 예시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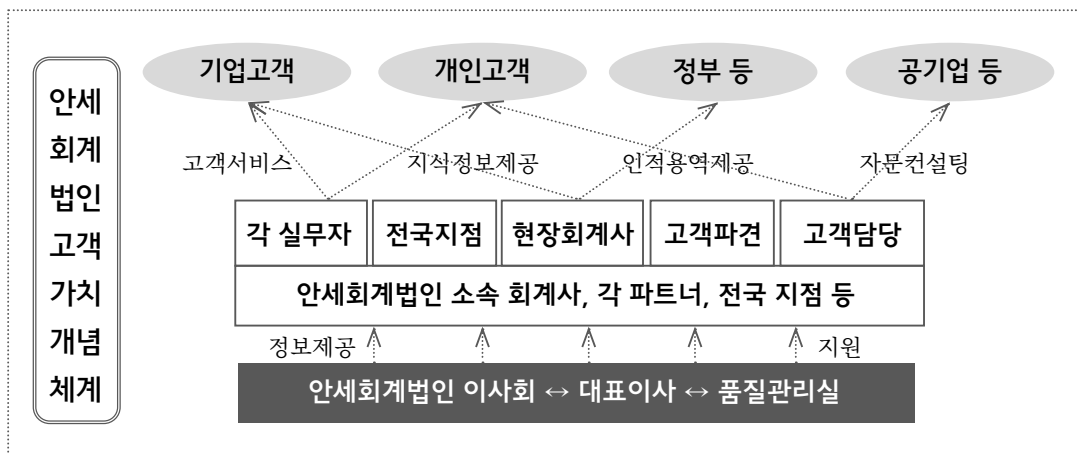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1. 원리원칙 제대로 실행한 외부감사와 가치평가는 공익을 보호하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2. 감사계약, 기중상시감사, 중간감사, 분반기감사, 기말실사, 연말감사시 감사위험 제거 안전절차와 방어수단 예시
 - ①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이 양호한 회사를 선정하여 외감계약함 : 분식회계유인이 비교적 적습니다.
 - ② 기업회계기준 철저준수의무를 공유함 : 수익비용 적정반영, 문제자산손상처리, 재무상황 완전공시
 - ③ 회계감사기준, 준칙, 실무지침 충실적용함 : 내부통제, 감사절차지시서 준수, 모든 계정 감사조서구비(금감원 방침 : 회계기준 문제없고 분식회계 아니라도, 감사절차가 미비하면 감리징계 적용함)
 - ④ 감사의견변형 : ①②③충족해야 적정, 일부라도 미충족하거나 미흡하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비적정
 - ⑤ 특기사항강조 : 재무상태불량, 계속손실, 누적결손이면 계속성불확실성 적극 표시, 특기사항강조
 - ⑥ 핵심감사사항(KAM : Key Audit Matters)을 보고서 본문에 기재 : 회계기준 위배와 감사절차 불충분 등 주요쟁점사항 알림
 - ⑦ 최종병기 : 必死則生임(피감회사의 반대와 불만에도 불구하고 비적정의견·불확실성, KAM(Key Audit Matters) 기재하고, 의견 차이시 계약을 포기·반납하면 미련없음)
 - ⑧ 최악상황 : 피감회사·경영진·주주·투자자·채권자·불특정이해관계자의 무차별적 무리한 민사소송(공동배상)(감리는 약 6개월 직무정지, 형사는 5천만원 벌금, 집단소송 민사는 이긴다해도 7년 이상 고통 → 외감민사소송의 80% 이상을 회계법인이 이기

는 통계라도 담당회계사는 10년 고생함.)

3. 특히 위험

임의감사(무언가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음), 가상자산실사(실재없음), 기업가치평가(대부분 고액투자유치 위해 매출성장률, 영업이익률 높게 추정) : 등잔밑이 어둡다고,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며 수임·실행한 업무에서 언제나 문제가 발생함. 국가나 조직의 모든 멸망·화(禍)의 근원은 “오만, 방심, 자만심, 자중지란, 설마, 이정도야, 모두 내게 맡겨, 그럴 리가 없어”라는 작은 실수에서 發火됨.



CEO는 없는 듯 있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경영의 귀재라고 불리는 GM의 잭 스미스 회장이 노자의 리더십을 좌우명으로 삼은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현자(賢者)의 가르침은 옛날과 지금이 따로 없고 동과 서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太上 不知有之(태상 부지유지)-가장 뛰어난 임금은 무위자연의 도(道)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가 있는 줄조차 모른다."

차선의 리더십은 백성과 친구처럼 가까이한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사모하며 예찬한다. 그보다 못한 임금은 법과 형으로 다스린다. 따라서 백성들은 그를 따르지만 경계한다. 한때 한국은 법은커녕 총칼과 주먹, 모진 고문으로 '통치'하던 불행했던 시절이 있었다. 때문에 한국은 늘 소란스러웠다.

다시 말하면 최상의 리더십은 그만큼 자연스럽게 일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자연스러움은 조용한 내면의 소통에서 나온다. 큰 강물은 소리없이 유유히 흐르지만 개울물은 요란하다.

개울 물소리는 요란하다

창업시나 조그만 기업일때는 간혹 우격다짐의 소리가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면 그럴수 없다. 더구나 시대도 변했다. 주먹과 협박으로 되는 세상이 결코 아니다. 한때 구둣발로 부하의 쏘인트를 까면서 요란을 떨던 재벌 오너의 신화(?)를 동경조차했던 과거도 있다. 우스꽝스럽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이제 오기(傲氣), 살기(殺氣), 광기(狂氣)카리스마가 통할 리 없다.

피터 드러커에 의하면 현대는 디자이너, 회계전문가, 마케터 등으로 구성된 지식 근

로자, 프로페셔널 시대다. 지식 그 자체가 생산성을 함유한 이동 사회가 됐다. Digital, Design과 스피버그처럼 환상을 창조하는 Dream의 3D시대가 됐다. 그래서 일한 댓가에서 생각한 댓가로 사는 세상이다. 그런데 CEO가 요동을 쳐대면 프로페셔널들은 내뺀다. 조직은 무너지고 네트워크는 붕괴한다. 그렇다고 해서 갈대같이 인기영합주의인 표퐁리즘에 빠져서는 안된다. 또 재미있는 현실은 자기보다 잘난 부하를 거느리지 못하는 CEO가 한국에는 의외로 참 많다. 영입은 고사하고 있는 인재도 내치기 일쑤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인재 타령은 제일 많이 해댄다.

더욱이 대체로 깨끗지 못한 CEO가 그렇다. "현명하고 창조적이며 경쟁력있는 동료들과 함께 한 것이 행복했다."고 술회한 GE의 전회장 잭웰치와는 판판이다. 음미해 볼 일이다.

참된 카리스마는 자연스럽다

또 못난 CEO치고 실제로 권한 위임을 제대로 하는 경우가 없다. 말로만 위임이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참견하고 실상을 잘 안다고 착각하면서 뽐내기 일수다. 게다가 공은 자기 것이고 실패는 남의 것이라는 심보다. 그래서 왕왕 헛된 명성이라도 얻을까 야단법석이다. 메스컴타기를 누구보다 사랑한다. 말하자면 포장술에 능한 요기(妖氣)카리스마다. 진실로 용기있는 리더만이 스스로 낮출 수 있고 침묵할 수 있다. 그것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고요한 경건의 삶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때 비로소 권한 위임도 가능하고 훌륭한 인재와도 동반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참된 리더로서 부하를 품고 변혁을 이룰수 있다. 이것이 곧 자기성찰의 결과다. 스스로의 성찰없이 환경의 흐름을 읽을 수도 없고 대응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자기 존재를 작게하는 겸손이 무위자연으로 녹아들어야 한다. 그 때 그는 호령하는 자가 아니고 경청자이며 존재하되 걸림이 없다. 소크라테스의 경청이 그를 현명하게 만들고 도꾸가와 이에야스의 인내가 대업을 이루었다.

스크랩 전용계좌 관련 문의

Q 거래처에서 철 스크랩 거래 보증금을 스크랩 전용계좌로 반환 요청하였습니다. 스크랩 전용계좌를 고철 대금 결제가 아닌 타용도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A 스크랩 전용계좌의 다른 용도 사용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가급적 스크랩 거래 전용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에 의한 객실 추가 보상비

Q 계약 조건에 일정 보증 객실수 사용에 대한 조항이 있고 보증 객실수에 미달 하여 추가로 객실비를 정산 한다면 해당 보상비는 위약금으로 보아야 될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A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귀사의 경우는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약된 것이 아니고 일정 수량에 대한 보증조건에 따른 정산비이므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수출품 소급

Q 수출품의 단가가 인하되어, 그 부분만큼 올해분 정산하여 외화송금 해줘야하는데, 계정과목이 어떻게 되나요?

제품수출시

외상매출금 / 제품수출

*단가인하 소급(인보이스발행)

1번

대변) - 제품수출

대변) 외상매입금 (대변에 제품수출마이너스 및 외상매입금 분개가 가능한지)

2번

차변) 잡손실 / 대변) 외상매입금 (수출품 단가인하라 지급을 위해서 외상매입금은 아닌것 같은데 가능한지)

3번

차변) -외상매출금 / -제품매출

외상매출금 / 외상매입금

A

매출(수출)후 단가가 인하되었다면 매출(수출)금액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되므로 3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회사간 거래

Q

관계회사간 거래에서 특이사항이 있어서요.

1. 중국 A사(당사가 지분36%소유)에서 제품 공정중 일정부분(71%)만 진행을 하고, 당사 국내로 수입되어져서 29%를 공정을 진행하고 다시 100% 제품을 중국 A사에 납품을 합니다.
2. A사에서 71%을 한국내로 수출(천안은 수입통관)하고, 통관절차를 진행함.
3. 천안은 71% 제품에 29% 공정을 진행하여 100% 완제품을 생산하여, 100% price로 A사로 수출함.
4. 매출매입대금은 71%를 A사에 주고, 100%을 받음.

질의사항)

1. 이러한 거래를 통해서 국제거래 및 국내 세무적인 이슈가 발생할까요?
2. 관계회사간 거래금액과 매출만 늘리고 실익은 별로 없는데요..(운임비(수출시 중국내 관세 납부등))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까요?

A

귀사가 국내에서 일부분의 위탁가공용역만 제공하고 위탁수수료 부분만 수입(매출)로 반영하는 거래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단순 위수탁용역거래임에도 귀사가 전체금액에 대해 매입 및 매출을 반영하는 처리를 하면 매입 및 매출과다 회계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는 실제의 사실과 다른 분식회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해외의 특수관계사와의 거래를 통해 거래의 실제 사실과 다르게 매출 및 매입을 과다 반영하면 문제가 됩니다.

미사용자산 및 유훈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상담실 백종훈 차장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유형자산을 취득하고도 사용하지 못하거나, 이미 취득한 유형자산의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취득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자산이나 가동을 중단한 자산의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기업회계상 미사용자산 및 가동중단 자산도 감가상각하고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함

현행 기업회계는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을 취득한 뒤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가동중지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을 하되 감가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사용 자산 또는 가동중지 자산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인데, 따라서 미사용 자산, 장기간 가동중지 자산, 단기간 가동중지 자산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감가상각을 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회계반영을 하면 된다.

◇ 일반기업회계 제10장 유형자산

10.35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손상차손 발생여부를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한다.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되, 그 감가상각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세무상로는 일시적 유훈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 인정함

법인세법은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건설중인 것,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일시적 유훈설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인정한다.

하지만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 및 취득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자산은 일

시적 유희설비에 포함시키지 않아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다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단기적으로 가동중지에 있는 유희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인정하고, 자산을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취득후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미사용 자산에 대해서는 기업회계와는 달리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회계에 따라 감가상각을 반영한 미사용자산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❶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희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영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희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등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등

♣ 서면2팀-1107, 2006.06.15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 및 장치 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입하여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되는 유희설비로 보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971, 2005.12.05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생산설비 등이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희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하는 것이나, 질의한 자산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일시적인 가동중단상태에 있는지,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상증세법상 주식가치 평가액

1. 일반적인 경우

1주당 주식평가액 = $\max(1\text{주당 순자산가치의 } 40\% + 1\text{주당 순손익가치의 } 60\%, 1\text{주당 순자산가치의 } 80\%)$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의 50% 이상인 법인)의 경우 = $\max(1\text{주당 순자산가치의 } 60\% + 1\text{주당 순손익가치의 } 40\%, 1\text{주당 순자산가치의 } 80\%)$

2. 예외적인 경우(순자산가치로만 주식가치 평가)

- ① 상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 ② 사업 개시 전의 법인
- ③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 ④ 휴업 · 폐업 중인 법인
- ⑤ 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 ⑥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 ⑦ 법인 설립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주택 유형	종전	개정
상속주택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정시 소유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 * 수도권 · 특별자치시(읍 · 면 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종부세율(3%, 6%) 적용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 * 기본공제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 부담상한 적용
중증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부택	종부세 과세	합산배제 (비과세)주택에 추가
시 · 도 등록문화재		
어린이집용 주택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취득세 과세기준

'21년 12월 31일 이전	'22년 1월 1일 이후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그 외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거래시점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평가기준일 전 · 이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최종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일 잘하는 사람들의 자기관리 방법 9가지

1.대화하기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반응하고, 신체적 제스처를 사용하는 이런 요소들이 집중력을 높여준다.

2.취침 전 운동

밝은 장소에서 운동을 하면 신체가 빛에 반응해 더 많은 운동 에너지를 받게 된다.

3.물 마시기

커피를 많이 마시면 탈수현상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진다. 커피를 물로 대체하고, 커피는 단지 향을 맡는 것만으로 뇌를 활성화시키고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4.끄적이기

펜을 들고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나 그 날 해야 하는 일들을 종이에 써보고 일의 우선 순위를 정한 다음 관련 업무들을 함께 써보는 것이 좋다.

5.다른 일 하기

도무지 집중이 안 될 땐 오래 걸리는 일 대신 빨리 끝낼 수 있는 간단한 업무를 먼저 하면 기분이 훨씬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겨 지루한 업무도 금방 끝낼 수 있게 된다.

6.잔잔한 음악 듣기

음악은 이해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느리고 간단한 템포의 음악을 듣는다.

7.업무 쪼개기

두뇌는 일의 마무리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 프로젝트나 업무를 쪼개도록 하자.

8.스마트폰 숨기기

스마트폰의 벨소리나 알람을 다 끄고 서랍에 넣어 보관하면 주의를 잃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9.서서 일하기

지난 밤 잠을 잘 못 잔 탓에 피곤하다면 의자에 앉는 순간 쉬고 싶어진다.

잠시 산책을 하거나 일어서서 일을 하여 쉬고 싶은 마음을 깨워주도록 하자.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기계장치 임대하거나 수탁가공업체에 설치한 경우는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경영 여부와 무관하게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서면법인-3474, 2021.07.05

■ 질 의

- ××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질의법인은 '19년부터 '21년까지 ×× 제조용 공장을 신축하고 있음
 - ×× 제조용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20년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이하 "쟁점 기계장치")를 구입함
- '20년에 질의법인은 ××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관계회사를 설립(지분율 60%)함
- 질의법인은 '21년부터 신축공장과 쟁점 기계장치를 관계회사에 임대할 예정임
 - 질의법인은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지점)을 하였으며, 업종은 부동산임대업과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으로 등록함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과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20년 쟁점 기계장치 투자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해당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 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그 종사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는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됨

서면법인-3764, 2021.06.29

■ 질 의

- (주)○○○○(이하 "질의법인")는 주식회사 ○○(치과용 X-ray 기기 제조업체) 계열그룹(12개)의 지주회사로서
 - 그룹 계열사의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휴양시설(콘도, 리조트 등)을 건설하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임

질의내용

-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내국법인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설치한 휴식·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부동산이 종업원의 휴식·체육시설로 이용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 경로 후 거래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로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령재산-2289, 2021.06.30

■ 질 의

- 비상장주식의 양도계약체결 및 계약금만 지급받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2.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2.2.13.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로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로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전담 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서면법인-2573, 2021.07.20

■ 질 의

- 당 사업자는 반도체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활동 목적으로 CFD 유동해석프로그램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CFD 유동해석 프로그램은 전산 유체역학 기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물리 해석 모델의 해석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이며 이 프로그램으로 당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TRAP 내부유동 및 열분포 데이터 분석하고 그 결과값에 의해 개발 또는 개선을 진행하고 있음

질의내용

- 당사에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동해석 프로그램을 임차하면서 지급하는 임차비용이 조특령 [별표6]에 의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특, 서면-2015-법인-2529[법인세과-111], 2017.01.11.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 소프트웨어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유류세 인하 연장 내달 결정... 연장 불가피할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는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 조치의 연장여부를 내달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상승세가 내달에도 지속될 경우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조치의 연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장 조치에 무게를 뒀다.

홍 부총리는 23일 오후 울산 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해 국내 석유 수급·비축현황과 비상상황에 대비한 방출계획 등을 점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OPEC+의 생산능력 회복 지연 등 공급측 차질에 더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산유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며 2014년 이후 7년만에 최고치인 배럴당 90불대까지 상승했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국제유가 추가상승 및 수급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울산 석유비축기지를 현장방문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제석유시장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내 석유 수급·비축현황과 비상시 방출계획을 점검했다.

그는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악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추가상승할 경우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 수요를 반영해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폭·대상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딜·혁신·코로나피해 중소기업에 세정지원

관세청이 한국판 뉴딜·혁신 등 미래 성장기업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4일부터 '2022년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세정지원이란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와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기업 경영에 큰 손실을 본 기업 또는 지진·태풍 등 각종 재

난 재해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포함해 한국판 뉴딜기업, 기술·경영 혁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및 청년 새싹 기업 등 다양한 성장 중소기업까지이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 대상 업체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된 동안 담보 제공을 생략해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 금융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중소·중견 기업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활성화한다.

셋째, 환급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세관장이 직접 미환급정보를 제공해 주고,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 여부만 표시하면 별도의 환급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지급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미래 기술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우리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주택자, 집 한 채 상속때 종부세↓... 3년내 안팔면 주택수로

앞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가격을 막론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최대 3년 동안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면서, 주택상속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부담이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 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22.2.15(화) 공포 · 시행

— 기획재정부, 2022. 2

- 2.8일(목)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21개)이 2.15일(화) 공포 · 시행됩니다.
- 동 시행령은 '21.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선도형 경제 전환 등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

- ❶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3대 분야 34개의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분 야	구 분	기 술
반도체 (20개)	메모리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70단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 등
	시스템	차량용·에너지효율향상·전력반도체·DDI칩 설계·제조기술 등
	소·부·장	반도체용(15nm이하 D램, 170단이상 낸드 등) 웨이퍼 개발·제조기술 등
배터리 (9개)	상용배터리	고에너지밀도·고출력·장수명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제조 기술 등
	차세대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 기술
	소재·부품	고용량 양극재(니켈함량 80%이상), 장수명 음극재(충방전 1,000회 이상) 제조 기술 등
백신 (5개)	개발·생산	항원, 핵산, 바이러스백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기술
	시험	세포·동물 모델로 백신 후보물질을 평가하는 비임상 시험 기술 등
	원·부자재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원부자재 및 면역보조제 개발·제조기술 등

〈사 례〉

- ▶ (종전) 12나노미터 이하급 D램 기술개발 시 신성장·원천기술로 R&D 세액공제 적용
(공제율 : 중소 30~40% / 중견·대 20~30%)
- ▶ (개정)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기술개발 시 국가전략기술로 R&D 세액공제 적용
(공제율 : 중소 40~50% / 중견·대 30~40%)

- ②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12→13개)하고, 신규기술을 추가(235 → 260개)*하는 등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R&D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탄소중립 분야에 19개 신규 기술 추가 + 미래유망 기술(미래차·자원순환·바이오 등), 공공망 위험 대응기술(요소수 등) 등 8개 신규 기술 추가

〈사 례〉

- ▶ (종전) 탄소중립 관련 수소분야의 수소 생산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 적용 안 됨
- ▶ (개정) 그린수소·블루수소 등 청정수소 생산기술 개발시 신성장·원천기술로 R&D 세액공제 적용

< 2.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 ①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업종별 조정률을 합리화*하고, 고임금 근로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 26개 업종 6단계 → 29개 업종 10단계로 세분화, 업종별 조정률 조정 등

** 연도 말 현재 계속 근무 중 + 월 평균 급여액(일용근로소득 제외) 500만원 이상인 자

〈사 례〉

- ▶ (종전) '22년 사업소득이 5,000만원인 일반음식점을 영위하는 1인 가구*
→ 조정률(45%) 적용시 기준소득은 2,25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불가
* '22년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은 2,200만원
- ▶ (개정) 음식점업 조정률 인하(45 → 40%)에 따라 기준소득이 2,000만원이 되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

- ② 중산서민층,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차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3.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①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

-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



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며,

* 기본공제액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150%, 300%) 적용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의 경우에는 합산배제(비과세)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주택 유형	종 전	개 정
상속주택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정 시 소유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 *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법인 종부세율(3%, 6%) 적용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 * 기본공제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 적용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어린이집용 주택	종부세 과세	합산배제(비과세) 주택에 추가

〈사 례〉

- ▶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0억원, 조정대상지역)가 1주택(공시가격 6억원, 조정대상지역)을 '21.3.1일 상속받은 경우 가정 ※ 세부담 상한 미반영

구 분	기존 주택 (억원)	상속 주택		종 전				개 정	
		지분율 (%)	가 액 (억원)	상속 전		상속 후		주택 수* (호)	종부세 (만원)
				주택 수 (호)	종부세 (만원)	주택 수 (호)	종부세 (만원)		
공동상속	10	30	1.8	1	-	2	825	1	341 (△484)
단독상속		100	6	1	-	2	1,833	1	849 (△984)

* '23.3.1일(수도권 등 외 지역의 경우 '24.3.1일)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 그 후 주택 수에 포함 (⇒중과세율 적용)

- ② 이 외에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율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였습니다.

〈사 례〉

- ▶ 1천만원을 미납한 납세자의 경우 1년간 납부지연가산세부담 약 11만원 감소
 - * 연간환산 납부지연가산세율: (종전) 연 9.125% → (개정) 8.03%(연간 약 1.1%p 인하)

※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케이스를 기반으로 다음주 중 추가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

□ 한편, 금일 공포된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2.10~24일) 중이며, 부처협의 ·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2.3월 중 공포 ·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택 유형별 세부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2022. 2

□ 정부는 2022.2.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주택 유형	종 전	개 정
① 상속주택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정 시 소유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 *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
②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보유주택	법인 종부세율(3%, 6%) 적용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 * 기본공제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 적용
③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주택	종부세 과세	합산배제(비과세) 주택에 추가

①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①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외 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② 기타 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 다만 상속 후 2~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 사 례 〉

- ▶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0억원, 조정대상지역)가 1주택(공시가격 6억원, 조정대상지역)을 '21.3.1일 상속받은 경우 가정 ※ 세부담 상한 미반영

구 분	기존 주택 (억원)	상속 주택		종 전				개 정	
		지분율 (%)	가 액 (억원)	상속 전		상속 후		주택 수* (호)	종부세 (만원)
				주택 수 (호)	종부세 (만원)	주택 수 (호)	종부세 (만원)		
공동상속	10	30	1.8	1	-	2	825	1	341 (△484)
단독상속		100	6	1	-	2	1,833	1	849 (△984)

* '23.3.1일(수도권 등 외 지역의 경우 '24.3.1일)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 그 후 주택 수에 포함(⇒중과세율 적용)

- ②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의 경우 법인으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단일 최고세율(3%, 6%), 기본공제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배제

** 누진세율(0.6~3.0%, 1.2~6.0%), 기본공제액 6억원, 세부담상한(150%, 300%) 적용

- 종전에는 법인격을 남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과세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구성원 또는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나,
 - 종중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에 대한 높은 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사 례 〉

- ▶ 여러 가구가 모여 거주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A는 가구별로 1채씩 주택을 보유했으면 부담하지 않았을 종부세를 기본공제 없이 6% 세율로 과세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음
- 앞으로는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정관 또는 규약에 설립목적으로 명시하고 그 목적에 맞게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일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 세부담이 완화됨



- ④ 그 밖에도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부세를 비과세(합산배제) 하였습니다.

〈 사 례 〉

- ▶ 지방에 소재한 B서원은 C도의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나 종전 규정에 따르면 국가등록문화재에 한정하여 합산배제되므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였음
-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과세(합산배제) 대상을 시·도 등록문화재로 확대하여 B서원과 같이 보존가치가 있는 지방 문화재 주택에도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부여됨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토지 보유분에 대해 11월말 국세청 고지, 12.1.~12.15. 납부

- 또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 보완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2월 18일 (금)	2월 21일 (월)	2월 22일 (화)	2월 23일 (수)	2월 24일 (목)
미 달 러 (USD)	1197.10	1196.40	1194.60	1194.70	1192.10
일 본 엔 (JPY)	1042.45	1041.25	1042.45	1038.33	1037.19
영 국 파 운 드 (GBP)	1630.45	1626.39	1624.66	1623.66	1614.52
캐 나 다 달 러 (CAD)	942.19	937.87	936.43	935.81	936.16
홍 콩 달 러 (HKD)	153.49	153.38	153.12	153.13	152.74
위 안 화 (CNH)	189.01	188.86	189.10	188.58	188.51
유 로 화 (EUR)	1360.80	1354.38	1350.38	1353.54	1347.31
호 주 달 러 (AUD)	860.18	858.24	858.26	863.17	861.59
싱 가 폴 달 러 (SGD)	891.06	888.46	886.96	888.29	885.40
말레이시아링기트 (MYR)	285.87	285.81	285.82	285.44	284.82

사주지배 현지법인을 이용한 부자탈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등 전격 조사착수

— 국세청, 2022. 2

- (추진 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성실납세를 통해 성과와 이익을 나누기보다 부의 증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재산을 불리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자산가와 국내에서 사업장을 은폐하고 탈세한 다국적기업 등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 (조사 대상) 검증 결과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착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①,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이용한 자산가의 부자탈세) 전형적인 부자탈세 유형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tunneling*)하는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세 (21명)
 - * 굴을 파서 물건을 빼돌리듯 사주 등이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세금)을 빼돌리는 행위
 - (유형 ②, 고정사업장 은폐를 통한 다국적기업 탈세) 반도체·물류·장비 등 호황산업 영위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연락사무소로 위장하거나 국내 고정사업장을 지능적으로 은폐하고 탈세(13명)
 - (유형 ③, 불공정 자본거래 등을 통한 법인자금 유출) 대여금 등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간 주식 고저가 거래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 과세소득을 축소하여 소득 탈루(10명)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다각도로 실시하는 한편,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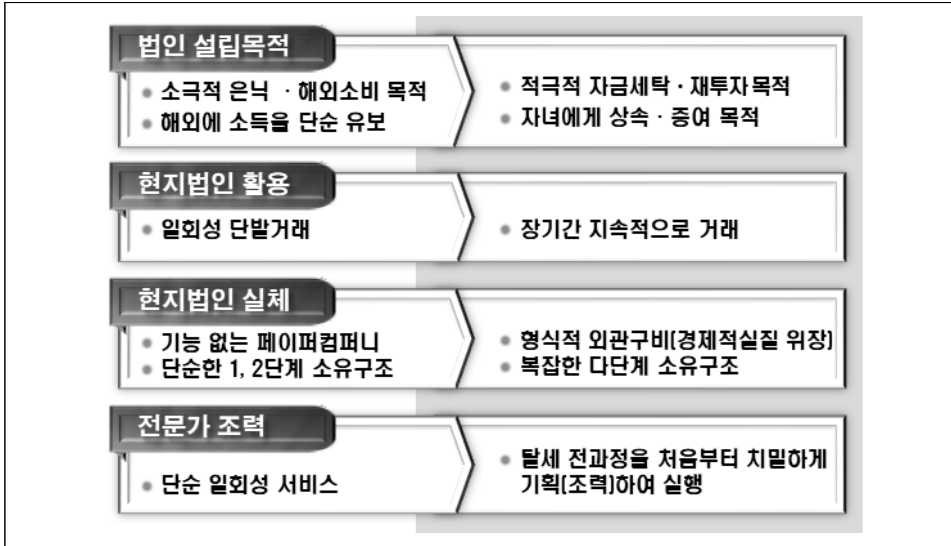
- 국민 모두의 헌신과 노력으로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대내외 경제여건으로 인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 국세청(청장 김대지)에서는 세무조사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코로나19로 풀린 유동성은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부의 집중과 자산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 * 순자산 상위 20%의 하위 20% 대비 평균 순자산 가액 : '17년 99.7→'20년 166.6배로 급증
- 국내 산업시장에서는 거대 자본과 공급망(Global network)을 보유한 디지털 기업 등 다국적기업이 시장 주도자(Rule Maker)로서 관련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납세를 통해 성과와 이익을 나누기보다 위기를 투자와 부의 증식 기회로만 인식하는 등
 - 일반인들은 실행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자산을 불리고 세금을 탈세한 자산가들의 부자탈세를 심층 분석하고
 - * 전문가 조력 및 자문 비용, 고액의 초기 투자자본, 현지법인 유지·관리비 등 상당한 경제력 필요
 - 반도체 · 물류 · 장비 등 호황산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장을 은폐하고 탈세하는 등의 불공정 역외탈세를 집중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2 조사착수 유형 및 사례

- 국세청은 체계적인 세무검증을 통해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탈루된 세금의 추징을 위해 즉각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 엄중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당국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사착수 유형은 3가지이며, 첫 번째는 '꼭두각시 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자산가의 부자탈세' 유형으로 조사대상자는 21명*입니다.
 - * 모두 수십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50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는 총 9명이며, 이중 100억원 이상 3명, 300억원 이상 2명, 500억원 이상 1명임
 - 이전에도 일부 자산가를 중심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세금탈세가 있어 왔으나, 이제는 다수의 자산가가 이용하면서 새로운 역외탈세 통로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 인위적 거래를 만들어 정상적인 법인으로 위장하는 등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은밀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수법의 진화]



-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는 상당한 경제력이 필요하여 일반인들은 시도하기 어려운 탈세 방법으로, 탈세 전 과정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획하여 실행하는 전형적인 부자탈세이며
- 해외에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이익을 유보시킨 뒤 역외 비밀지갑처럼 자금을 빼내어 해외자산을 취득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부를 더욱 증식하고 있습니다.
- 현지법인을 새로운 탈세통로로 이용한 구체적인 조사착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지법인 이용 역외탈세 조사착수 사례]

<p>사례1 사주의 재산증식</p>	<p>기업 사주가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세워 비자금 조성 후 해외주식 취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대재산가이며 기업사주인 A는 조세회피처에 직원 명의로 꼭두각시 법인을 설립해 놓고 - 국내법인에 지시하여 컨설팅 비용이나 대여금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하게 한 뒤 현지에서 이를 빼내 거래추적이 어려운 해외주식 취득에 사용하는 등 사주 개인의 부의 증식에 사용
<p>사례2 자녀에게 재산증여</p>	<p>현지법인을 탈세 통로로 활용하여 자녀에게 해외 고가주택 취득자금 증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유수의 식품기업 창업주 2세인 B는 자녀가 체류하고 있는 해외에 아무 기능 없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유보한 후 동 자금을 빼내 해외부동산 여러 채를 취득양도하여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이를 현지에서 자녀에게 증여하여 고가아파트 취득 및 체류비로 사용

사례3 자녀사업 현지지원	<p>자녀의 해외사업을 위해 현지법인을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유명 식음료기업 사주인 C는 해외에서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子を 지원하기 위해 현지 지에 이름뿐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 현지법인 설립운영 명목 등으로 자금을 보내 자녀가 현지에서 사업자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지법인을 역외 비밀지갑처럼 활용하여 자녀 사업자금을 부당 지원
---------------------	---

- 두 번째 유형은 '다국적기업의 고정사업장 은폐를 통한 세금 탈루' 유형으로, 조사 대상법인 은 총 13개입니다.
 -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하여 활발한 사업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 매년 약 1만여개의 외국계 기업이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으나,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등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 외국법인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의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하며,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외국계 기업 법인세 신고 현황]

(개)

구 분	계	외국법인	외국인투자법인
2019년	10,630	1,827	8,803
2020년	10,449	1,846	8,603

- 다국적기업은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전가격 조작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조세 회피를 시도하고 있으며, 고정사업장 은닉이 주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 OECD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BEPS* 프로젝트를 추진, 디지털세(Digital tax, 일명 '구글 세') 도입 논의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 BEPS(Base Erosion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를 통해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 등의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OECD 모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개정
-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국제조세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반도체·물류·장비 등 호황산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으며
- 이를 통해 고정사업장 은폐 및 국내 귀속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탈세한 13개 기업을 확인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주요 조사착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국적기업의 고정사업장 은폐 조사착수 사례]

사례4 단순업무 자원위장	<p>단순 업무지원 용역으로 위장하여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자회사에 임원을 파견하여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을 지배·통제(고정사업장 해당)하고 있으면서 - 자회사와의 형식적 계약을 통해 자회사가 단순 업무지원 용역만 제공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고정사업장 은폐
사례5 계 약 쪼개기	<p>계약 쪼개기(단계별 분할수주 계약)를 통해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건설공사(제조 공정시스템 설치 등)를 수행(고정사업장 해당)하고 있음에도 - 설계·제작, 설치, 감독, A/S 등 계약을 쪼개어 체결함으로써 누구도 중요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여 고정사업장 은폐

- 세 번째 유형은 '불공정 자본거래 등을 통한 법인자금 유출' 유형으로, 조사 대상법인은 총 10개입니다.
 - 국세청은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간 주식 거래 등 내부 자본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 여부를 정밀 검증하여
 -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 주식 증여를 가장한 국내원천 유기증권 양도소득 회피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과세소득을 축소한 10개 기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 하였으며, 주요 조사착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조사착수 사례]

사례6 불공정 자본거래	<p>현지법인 청산을 위장하여 투자액 손실처리 및 채권 포기로 부당이익 분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집적회로 등을 설계·제작하는 정보기술(IT) 기업으로 해외에 다수의 현지공장을 보유 - 실제로는 지분 매각을 진행하면서 현지법인을 청산한 것처럼 위장하여 투자액을 전액 손실처리하고, 채권채무 재조정을 통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등 관계사에 이익을 부당 분여
--------------------	--

- 또한 보도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에 조사 착수한 건과 유사한 내용의 기조사 사례 2건을 첨부하였으며
 - 다국적기업이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사례와, 해외사주(국외 지배주주)에게 해외 우량 현지법인 지분을 헐값에 넘겨 부를 이전한 사례를 수록하였습니다.

[기조사 첨부 사례]

사례7 다국적기업 원천징수누락	다국적기업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누락 -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노하우·기술 이전대가를 일반 제품대가에 포함하여 사업소득(국내 과세권 없음)으로 위장해 지급함으로써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
사례8 해외사주 이익분여	해외사주(국외 지배주주)에게 해외 우량 현지법인 지분을 헐값 양도 -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소화하고 해외사주(국외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해외 우량 현지법인 지분을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헐값으로 양도

3 그간의 추진 성과

- 국세청은 최근 3년간('19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41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총 1조 6,559억원('19년 5,629억원, '20년 5,998억원, '21년 4,932억원)의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였으며
 - * '19.5.16.(104명), '19.11.20.(171명), '20.8.27.(43명), '21.3.24.(54명), '21.7.7.(46명)
 -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역외 블랙머니(black money) 비밀계좌 운용 등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 향후 업무추진

- 역외탈세는 탈세 전 과정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되어 계획적으로 실행되는 반사회적 행위인 만큼 조사역량을 집중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 역외탈세가 새로운 탈세통로나 부의 대물림 창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디지털세(Digital tax) 논의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 탈루혐의 확인 시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과세주권 행사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다각도로 실시하는 한편,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불공정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 고

고정사업장 설명자료

●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개요

- (개념)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의 고정된 장소로, '예비적·보조적 활동장소'가 아닌 장소
 - * 국내 세법에서는 '국내사업장'이라는 용어 사용
(고정사업장 예시 : 고정된 판매장소, 공장, 건설공사 현장 등과 같이 '일정한 사업 장소'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중요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장소)
- (예비적·보조적 활동장소) 사업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아니라 사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하거나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활동을 목적으로
- 자산의 단순 구입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산의 저장·보관, 광고 및 시장조사 등을 위한 장소를 말함

● 고정사업장에 따른 과세권 유무

- (과세범위 등)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과세 시 고정사업장 유무에 따라 과세범위와 방법을 달리 적용
- ①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 사업장 관련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른 내국법인들과 같이 소재지국에 법인세 등을 신고하여야 함
- ②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 법인세 등 세금 신고의무가 없으며, 국내 원천소득(사용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고정사업장 과세 강화

- * BEPS(Base Erosion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를 통해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 등의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OECD 모델조세조약 및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 개정

구 분	강화 전	강화 후
활동 기준 보장	고정사업장 제외 예시 장소(자산의 단순 구입·보관, 광고·시장조사 등을 위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서 제외	예시 장소에 해당하더라도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에 포함 (불임 '사례4'와 유사)
거래의 통합	사업활동이 분할되어 특정 장소에서의 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서 제외	결합한 전체 활동이 중요한 활동이거나 특정 장소에서의 활동이 본질적인 사업 활동과 상호보완적인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 (불임 '사례5'와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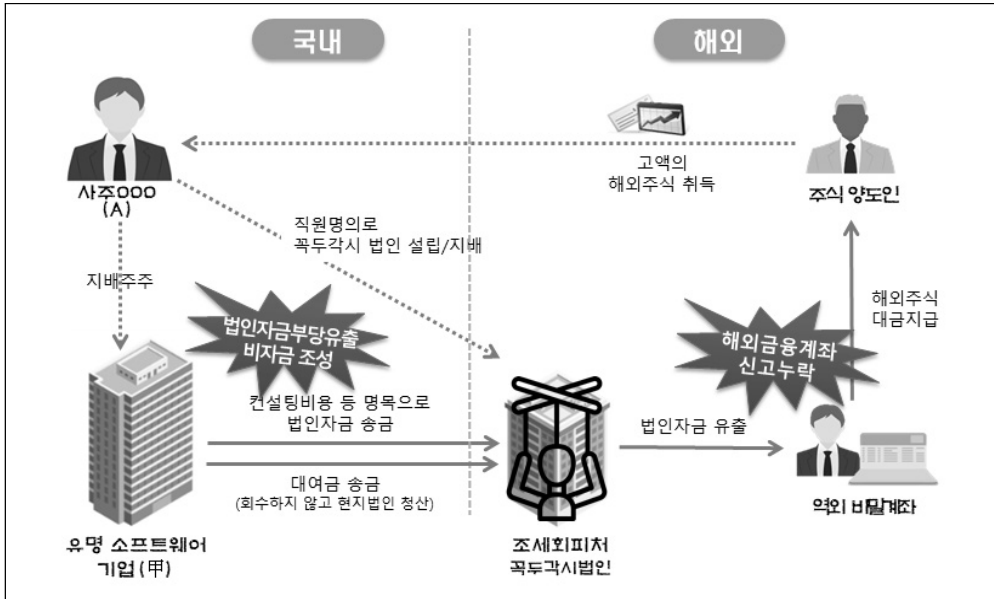
붙임

세무조사 착수 및 기초사 사례

사례1
(착수)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세워 해외비자금 조성 후 해외주식 취득

* 조세회피처에 직원명의로 꼭두각시 법인을 설립하고, 컨설팅비용 등명목으로 거액을 보내 해외비자금을 만든 후 현지에서 유용·은닉



● 주요 탈루혐의

- 사주 000은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대재산가로 국내 유명 소프트웨어 제작·개발 기업인 甲법인의 지배주주임
- 사주 000은 해외비자금 조성을 위해 甲법인의 직원 명의로 조세회피처에 자신이 지배·관리하는 꼭두각시 법인을 설립
 - 甲법인은 사주의 지시에 따라 컨설팅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지법인에 고액을 송금하여 조세회피처에 비자금을 조성하고
 - 현지법인에 고액의 법인자금을 대여한 후 현지법인을 임의 청산하여 甲법인에 손실을 발생시킨 후 자금은 해외에 은닉
- 000은 비자금을 역외계좌로 관리하며 고액의 해외주식 취득 등으로 개인자산을 불리면서도 해외계좌 등 관련제세 신고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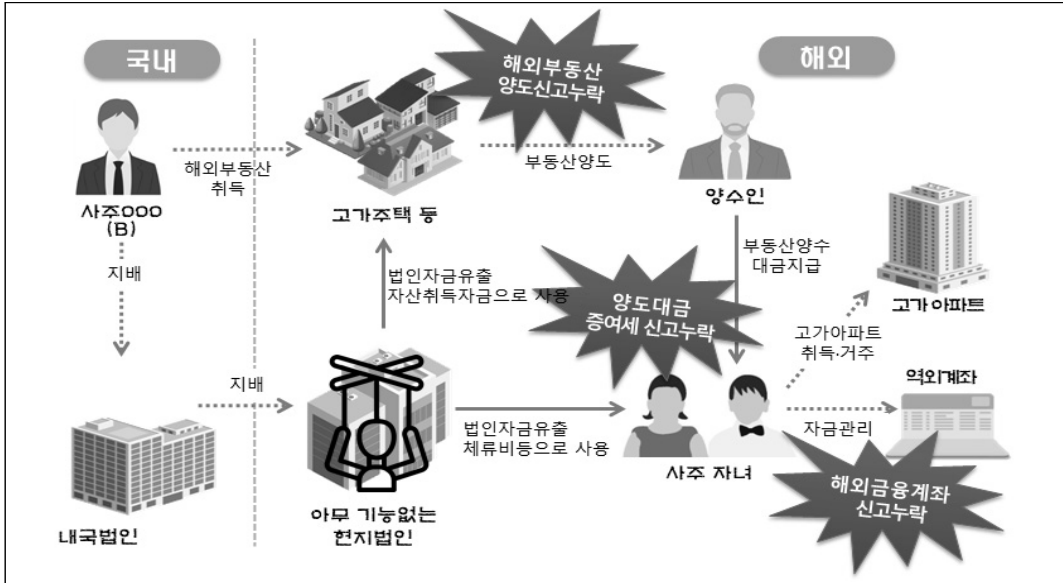
● 조사 방향

- 현지법인 거래, 사주의 해외금융계좌 운용내역 등을 면밀히 검증

사례2
(착수)

현지법인을 탈세통로로 하여 자녀에게 고가아파트 취득자금 증여

* 아무 기능없는 현지법인을 설립해 자금을 빼내고 자녀에게 현지 부동산 처분대금을 증여하는 등 정당한 대가없이 부를 더욱 증식



● 주요 탈루 혐의

- ○ ○ ○ 는 국내 우수 식품기업 창업주의 2세로 국내외 다수의 부동산과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금수저 사주임
- ○ ○ ○ 는 해외 거주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현지에 아무런 사업기능 없는 명목상의 현지법인을 설립
- 내부거래를 통해 현지법인에 이익을 유보시킨 후 이를 편취, 현지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하여 거액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매매대금은 현지에서 자녀에게 현금 증여하여 비밀계좌로 관리
- 자녀는 현지 유명학군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등 교육대물림을 강화하면서 재산도 증식
- 사주와 자녀는 해외부동산 양도 및 현금수증, 해외금융계좌 보유 등에 대해 아무런 세금신고를 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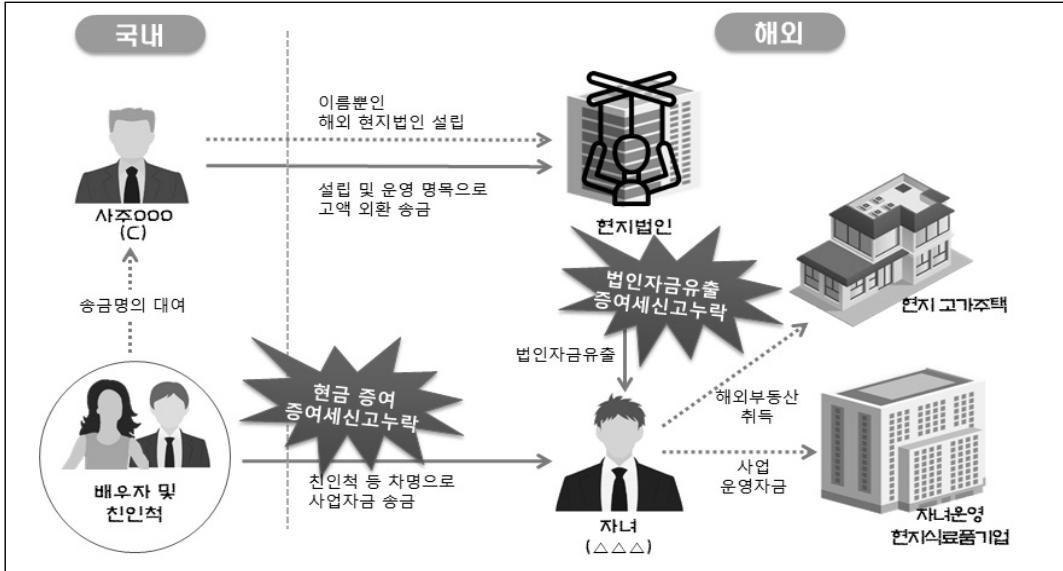
● 조사 방향

- 관계사간 내부거래, 부동산 매매 자금흐름 등에 대해 정밀 검증

사례3
(착수)

자녀의 해외사업을 위해 현지법인을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

* 해외에 이름뿐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에서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자녀의 사업자금 지원 창구로 활용



● 주요 탈루혐의

- ○ ○ ○ 는 국내 지명도 있는 식음료기업의 사주로 서울 등지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이며, 자녀 △ △ △ 은 해외 현지에서 식료품 기업을 운영 중
- ○ ○ ○ 은 해외에 이름뿐인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설립·운영비 명목으로 자금을 계속 보내고, △ △ △ 가 받아 현지 사업자금으로 운영
 - 자녀 △ △ △ 은 기업 운영비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으로 현지에서 고가주택을 취득하여 거주
- ○ ○ ○ 은 배우자 및 친인척 명의로 해외 자녀에 개인 이전거래 등의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사업자금을 송금하고 증여세 신고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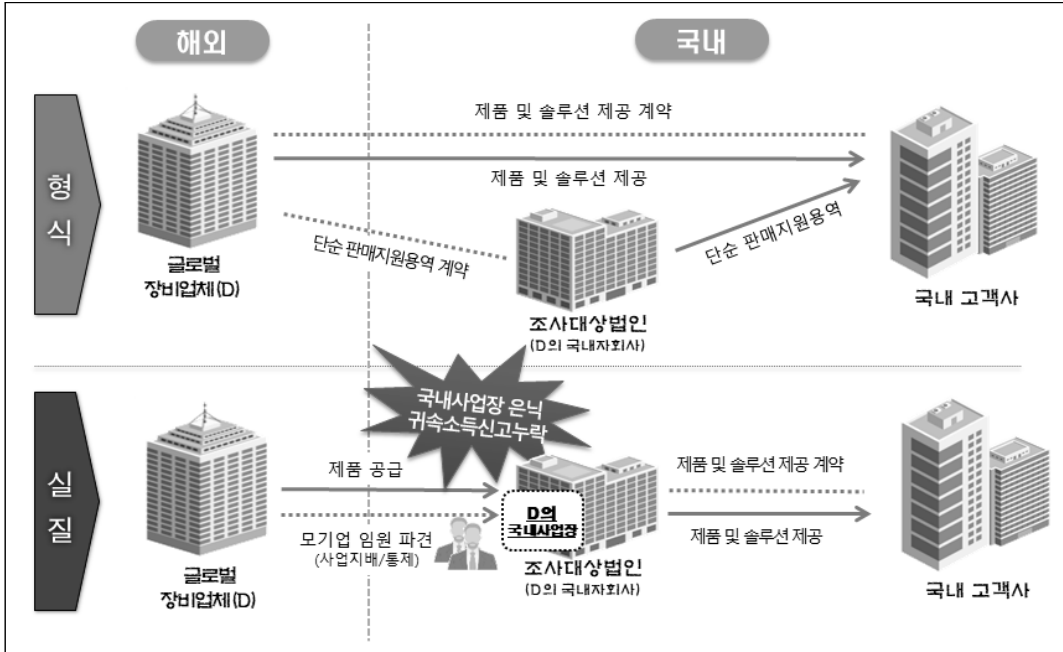
● 조사 방향

- 외환 송금액 등 외환거래 자금 흐름 및 해외 현지법인과 거래내역 철저히 검증

사례4
(착수)

단순 업무지원용역으로 위장하여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

* 형식적 계약을 통해 국내 자회사가 A/S 등 단순 업무지원용역만 제공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고정사업장 은닉



● 주요 탈루혐의

- 글로벌 장비업체 D사는 형식적으로 국내 고객사와 제품(장비) 및 솔루션을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 국내 자회사는 제품을 구매한 국내 고객사에 대해 단순 판매지원용역(사용설명, 통상적 A/S 등)만 제공하는 것으로 거래구조를 설계
- D사는 모회사 임원을 파견하여 자회사를 통해 고객관리, 판매, A/S, 리스크 관리 등 중요한 역할을 모두 수행(고정사업장 해당)
 - 국내 자회사에 고정사업장이 있음에도 계약상 자회사가 수행하도록 되어있는 단순 지원 용역 관련 최소한의 소득만 국내에 귀속시키고, 거래관련 대부분의 소득을 국외 모회사로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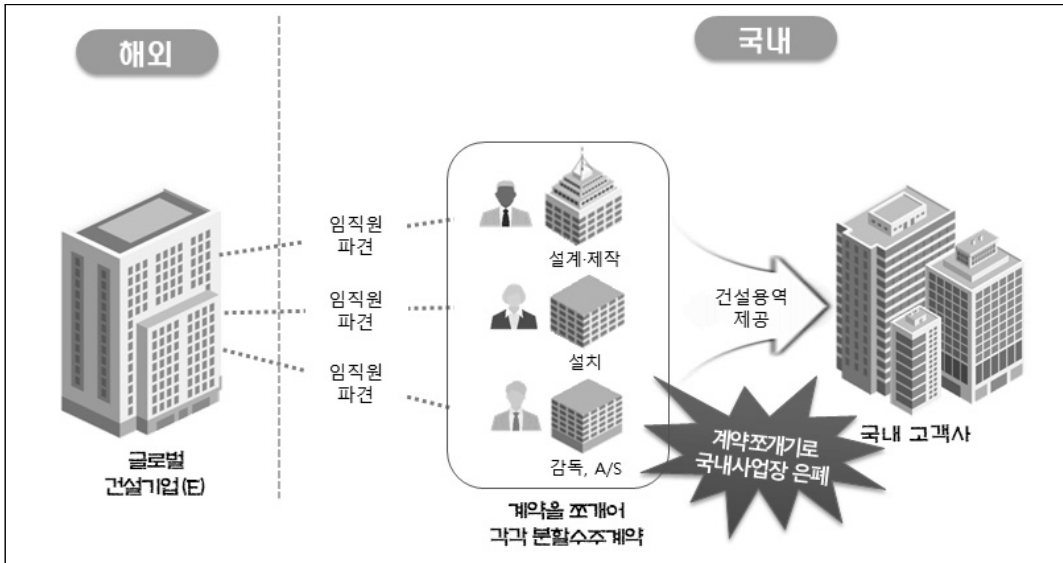
● 조사 방향

- 국내 자회사의 수행기능, 위험부담 등 사업구조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검증하여 고정사업장 은닉 여부 확인

사례5
(착수)

계약 쪼개기(단계별 분할수주 계약)를 통해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

*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공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계약을 쪼개어 각각 체결함으로써 핵심기능을 은폐하고 고정사업장 회피



● 주요 탈루혐의

- 글로벌 건설기업 E사는 국내 고객사와 건설용역(제조 공정시스템 설치 등)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다수의 임직원을 파견
 - E사는 파견 임직원을 통하여 국내 건설사업(현장)을 관리·통제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제공
-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설계·제작, 설치, 감독, A/S 등 거래단계별로 사업 활동을 쪼개어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고 국내 미등록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 신고 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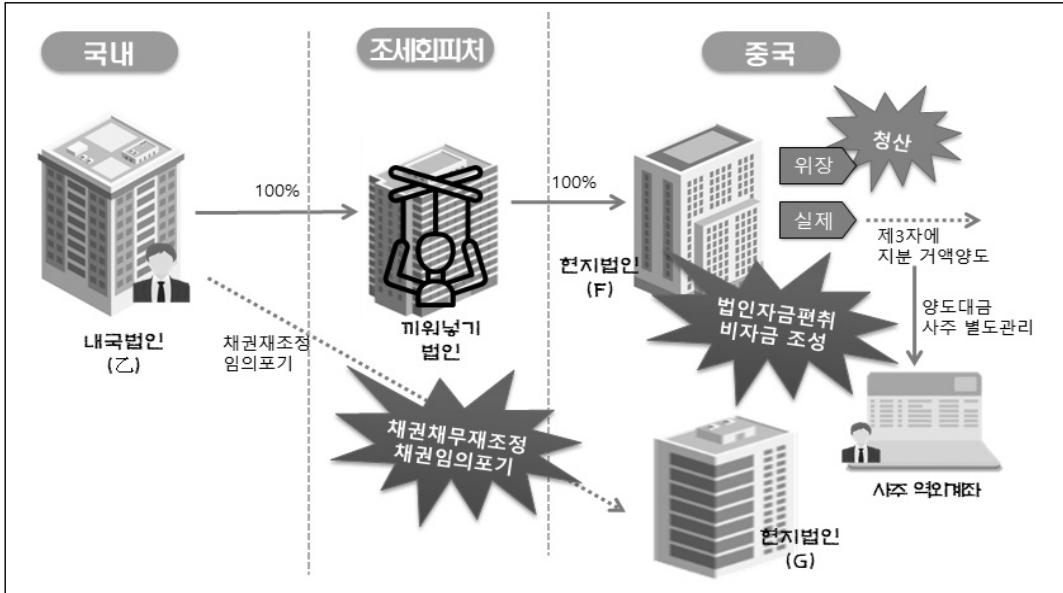
● 조사 방향

- 용역의 거래구조, 파견 임직원의 수행 기능, 계약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미등록 사업장 여부 확인

**사례6
(착수)**

현지법인 청산을 위장하여 투자액 손실처리 및 채권임의포기

* 현지법인 지분 매각을 진행하면서 청산으로 위장하여 투자액을 손실처리하고, 채권채무재조정을 통해 채권을 임의포기



● 주요 탈루 혐의

- 내국법인 乙은 반도체 집적회로 등을 설계·제작하는 IT기업으로 해외에 다수의 현지공장을 두고 있음
- 乙법인은 현지법인 F사를 설립하면서 조세회피처 법인을 끼워넣어 F사를 간접 지배하는 형식으로 투자구조를 복잡하게 설계
 -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다 사업변경 등으로 현지법인(F) 지분 매각을 진행하면서 청산한 것처럼 위장하여 투자액을 전액 손실처리
- 乙법인은 현지법인 G사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채권채무 재조정을 실시하면서 임의로 채권을 포기하는 등 관계사에 이익을 부당 분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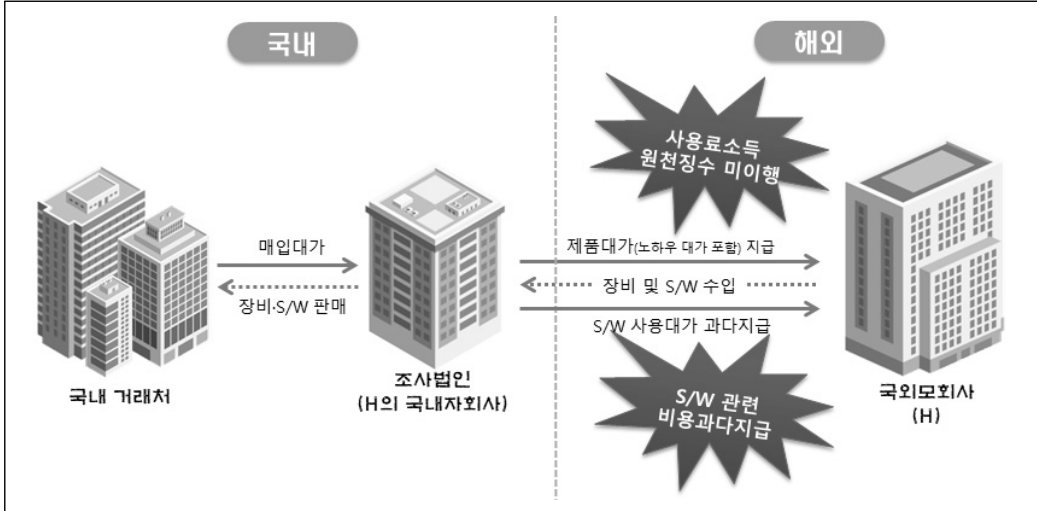
● 조사 방향

- 현지법인 운영 및 거래관계, 청산 및 지분 매각 관련 자금흐름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증

**사례7
(기조사)**

다국적기업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누락

*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노하우·기술 이전대가를 일반 사업소득으로 위장하여 원천징수누락하고, 소프트웨어 사용대가 등 과다지급



● 조사 내용

- 조사법인은 글로벌기업 H사의 국내 자회사로 장비 및 소프트웨어(S/W) 판매를 위해 H사로부터 관련 제품(S/W 포함)을 수입하고
 - 노하우·기술 이전 대가(사용료에 해당)를 포함하여 제품대가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위장하여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
- 또한 H사로부터 직접 수입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에 대해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등 관련 비용을 과다 계상하고
 - 조사법인이 자체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등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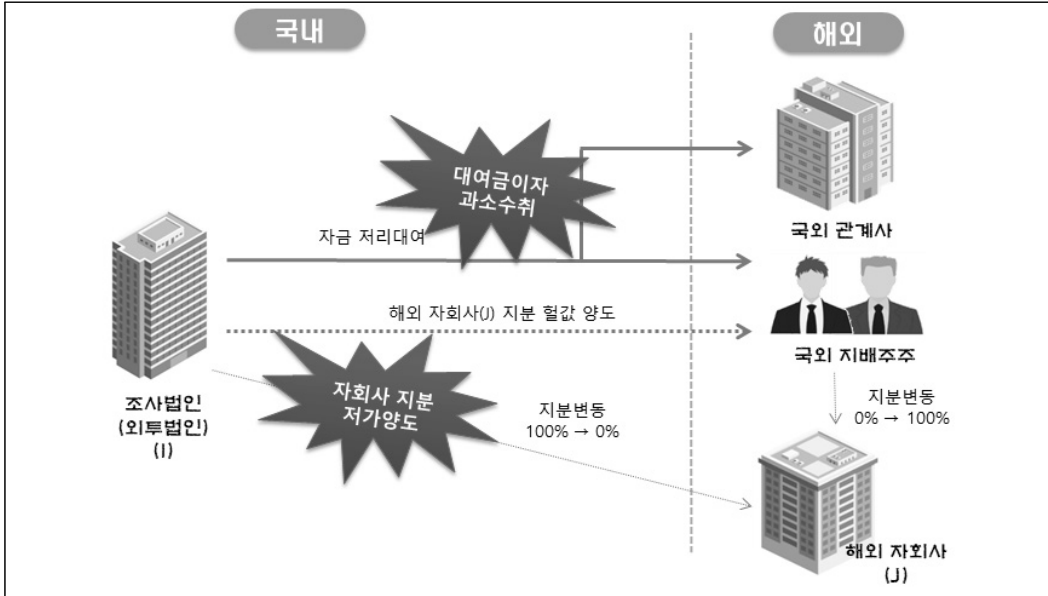
● 조사 결과

-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누락 및 비용 과다계상 등에 대해 법인세 등 000억원 추정

사례8
(기조사)

국외 지배주주에게 해외 우량 현지법인 지분을 헐값에 양도

* 국외 지배주주들에게 해외자회사 지분을 헐값에 양도하고, 법인자금 저리 대여를 통해 이익을 분여하는 등 국내 부를 부당 이전



● 조사 내용

- 조사법인 I사는 해외사주(외국국적 지배주주)에게 해외자회사(J) 지분을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헐값에 양도
 - I사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식평가액을 낮게 계산하고 법인세를 과소신고
- 또한 국외 지배주주들과 국외관계사에 고액의 자금을 저리로 대여하고 관련 이자를 과소수취

● 조사 결과

- 해외자회사 지분 저가양도 및 대여금 정상이자 과소 수취에 대해 법인세 등 000억원 추정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가 강화됩니다

- 금융감독원, 2022. 2

- ◆ 신규 상장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lock-up) 대상에 포함 → 6개월간 처분제한
- ◆ 상장기업이 주식 의무보유 적용 대상자별로 보유 기간을 다르게 설정(6개월~2년6개월)하도록 유도 →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공시

1 추진 배경

- 신규 상장시 적용되는 의무보유(lock-up) 제도는 특별한 이해관계나 경영상 책임을 가진 자(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가 소유한 주식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통상 6개월)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 상장 초기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급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주가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코스닥은 '99.8월, 코스피는 '00.6월에 각각 도입
- 의무보유 대상자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전에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되지만,
 - 상장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최근 일부 상장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2 의무보유제도 현황 및 문제점

- 한국거래소는 신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소유한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 간 의무적으로 보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거래소 상장규정).
-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최대 주주의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등)
 - 의무보유 대상 주식등*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등록되며 기간 만료시에 해제됩니다.
 - * 주권, 신주인수권 및 CB·BW 등 주식관련 사채 등

〈상장시 의무보유 대상자 및 기간〉

유형	의무보유 대상자	의무보유기간(상장일부터)	
		유가	코스닥
최대주주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6개월*	6개월**
상장전 취득 (예비심사 청구 전 1년 이내)	제3자배정 주식등 취득자	Max [상장일부터 6월, 발행일부터 1년]	6개월**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취득자	6개월	6개월**
투자자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 (투자기간 2년 미만인 경우)	-	1개월
	기타(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대주주인 경우 1년

** 기술성장기업 또는 신속이전기업(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등의 경우 1년

- 현행 규정상으로는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와 달리 상장 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은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소유한 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상장 전·후)에 따라 의무보유제도 적용여부가 달라지고,
 -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의무보유제도의 기본취지를 우회할 우려가 있습니다.
- 한편, 현행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보유 기간은 최소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규 상장기업들은 모든 의무보유 대상자에 대해 보유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상장 후 6개월이 지난 직후에 매도 물량이 집중되면 가격 변동성을 높일 우려도 있습니다.

3 개선 방안

- ①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이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의무보유 대상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은 취득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됩니다.
 - * (예) 신규상장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향후 4개월 동안 의무보유
 -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현재 규정된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로 포함됩니다.
 - *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 등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등(상법 §401의2)
 - ※ 코스닥 상장규정은 의무보유 대상자인 임원에 업무집행지시자를 이미 포함
- ② 의무보유기간 만료시 매도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의무보유기간을 차등화하여 설정(staggered system)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6개월의 기본기간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하여 의무보유 제도를 차등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 예를 들어, 회사는 대표이사(등기임원) 보유주식은 1년(기본 6개월 +추가 6개월), 업무집행지시자 보유주식은 6개월을 적용하는 식으로 의무보유 기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 ※ 코스닥 상장규정은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연장 제도를 이미 도입
 - 신규 상장기업의 자발적 보유확약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의무보유 대상 주식등에 대해서도 예탁결제원에 등록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③ 의무보유 대상자, 대상자별 주식등 내역과 보유기간 등은 상장시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시장에 투명하게 공시될 예정입니다.

〈 금번 개선 방안에 따른 변화(요약) 〉

	종전	변경	비고
① 의무보유대상	주식등	주식등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코스피·코스닥 동일
② 의무보유대상자	최대주주 및 임원 등	최대주주 및 임원 등 + 상장 신청기업의 업무집행지시자	코스닥 상장규정의 경우 이미 적용중 (코스피 추가적용)
③ 의무보유기간	(사실상) 6개월	6개월 + 2년 추가 가능	

4 향후 계획

- 금번 개선 방안은 거래소 유가·코스닥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예정입니다.
-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은 증선위·금융위 승인(' 22.3월 중)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 새롭게 개편된 의무보유제도 관련 사항이 공시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관련 서식 개정도 병행 추진될 예정입니다.

참고 -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개요

-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자가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행사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기본적으로 상법에서 규율
 - 회사는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할 수 있는 임직원(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등)에게 부여가능(§ 340의2)
 - 이사회결의(상장사) 또는 주총결의(비상장사)를 통해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부여(§ 340의2, § 542의3)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한 이후 행사가능(§ 340의4, § 542의3)
 - 상법에서도 스톡옵션 행사 후 매각에 대해서는 별도 규율 없음
- 벤처기업법은 상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회사 밖의 특정인*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추가허용
 - * 기술·경영혁신 등에 기여한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원,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전문가 등
- 자본시장법은 공시측면에서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규율
 - 상장사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행사·매각이 공시됨
 - 상장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 165의17),
 - 주식매수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매각되는 경우 임원·주요주주의 소유상황보고 (§ 173)를 통해 공시*
 - * ①임원이나 주요주주의, ②증권등 소유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③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시토록 규율하여, 일반 직원의 경우까지 공시되는 것은 아님
 - 비상장사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통해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행사 현황을 공시

2021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 금융감독원, 2022. 2

I 개 요

☑ 금융감독원은 매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및 감사인 지정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 22.1.27.)에 보고한 후 그 내용을 발표

☑ 2021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3,250사로 전년(31,744사) 대비 1,506사(4.7%) 증가

- 新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기준이 변경*되어 2020년에는 외부감사대상이 일시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자산 및 부채 기준 충족 등으로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5.5%)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

* 외부감사대상 기준의 변동 및 일부 SPC 등 외부감사 제외

외부감사대상 기준 변경 前	외부감사대상 기준 변경 後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신설)
1. <신설>	자산총액 500억원↑	
2. <신설>	매출액 500억원↑	
3. ① 자산 120억원↑, ② 부채 70억원↑, 자산 70억원↑, ③ 종업원수 300명↑, 자산총액 70억원↑	3. ① 자산 120억원↑, ② 부채 70억원↑, ③ 매출액 100억원↑, ④ 종업원 100명↑, ⑤ 사원 50명↑(유한회사에 限)	
①, ②, ③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	①~④ 중 2가지 이상	①~⑤ 중 3가지 이상

☑ 2021년 중 공정한 감사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는 1,969사로 전년(1,521사) 대비 448사(29.5%) 증가

- 지정사유별로는 주기적지정이 674사로 가장 많고, 상장예정법인이 481사, 재무기준* 미달 266사, 관리종목 164사 등의 順임

*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or 부의 영업현금흐름 or 이자보상배율 1미만

- 주기적 지정 및 상장예정법인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가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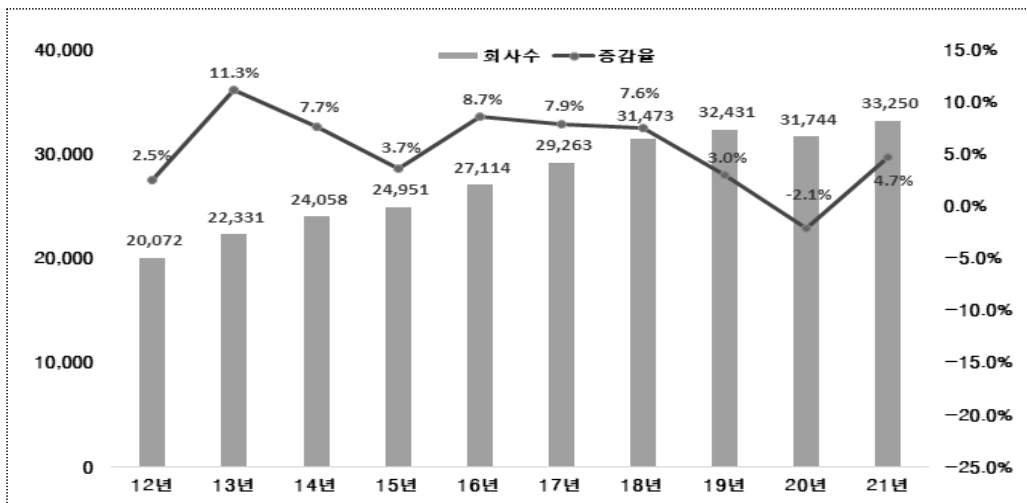
속적으로 늘어남

II 2021년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 2021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3,250사로 전년(31,744사) 대비 1,506사(4.7%) 증가하였음

- (제도개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함
- (외감대상 현황) 2021년말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3,250사로 전년(31,744사) 대비 1,506사(4.7%) 증가
 - 2021년에는 新외감법이 정착됨에 따라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5.5%)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

최근 10년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 (외감대상 분포) 외부감사대상 중 주권상장법인은 2,457사로 전년 대비 75사 증가하였으며, 비상장법인은 30,793사로 전년 대비 1,431사 증가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21.12월말 현재)

(단위:사, %)

구 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총 계
	주권상장법인				비상장 법인	주식회사 합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소계				
2021	815	1,511	131	2,457	30,315	32,772	478	33,250
2020	792	1,447	143	2,382	28,887	31,269	475	31,744
증감 (비율)	23 (2.9)	64 (4.4)	△12 (△8.4)	75 (3.1)	1,428 (4.9)	1,503 (4.8)	3 (0.6)	1,506 (4.7)

- 자산총액별로는 1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21,161사(63.6%), 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4,720사(14.2%), 1,000억원이상~5,000억원미만 3,893사(11.7%) 順
- 결산월별로는 12월 결산법인 32,044사(96.4%), 3월 결산법인 518사(1.6%), 6월 결산법인 293사(0.9%) 順

결산월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21.12월말 현재)

(단위:사, %)

구분 \ 결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 계
주권상장법인	-	1	21	1	1	15	-	1	6	-	4	2,407	2,457
비상장법인	32	30	497	29	36	278	20	21	153	44	16	29,637	30,793
합계 (비율)	32 (0.1)	31 (0.1)	518 (1.6)	30 (0.1)	37 (0.1)	293 (0.9)	20 (0.1)	22 (0.1)	159 (0.5)	44 (0.1)	20 (0.1)	32,044 (96.4)	33,250 (100.0)

- (감사인 선임)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25,412사(76.4%)가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하였고, 2,869사(8.6%)가 감사인을 변경 선임하였으며, 4,969사(14.9%)는 감사인을 신규로 선임함

감사인 선임 및 변경 현황 ('21.12월말 기준)

(단위:사, %)

감사인 변경여부	주권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총 계	
계속선임	1,762	23,650	25,412	76.4
변경선임	652	2,217	2,869	8.6
신규선임	43	4,926	4,969	14.9
총 계	2,457	30,793	33,250	100.0

III

2021년도 감사인 지정 현황

◆ 2021년에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969사로 전년(1,521사) 대비 448사 증가(29.5%)하였으며, 주기적지정 674사, 상장예정법인 481사 順

- (제도개요)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자
유선임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임
- (지정현황) 2021년 중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969사로 전년(1,521사)보다 448사 증가
(29.5%)
 - 지정회사 수가 증가한 사유는 주기적 지정(212사↑), 상장예정법인의 지정신청 증가(119사
↑) 등에 기인
 -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지정회사 비율은 5.9%이며, 이 중 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51.1%, 비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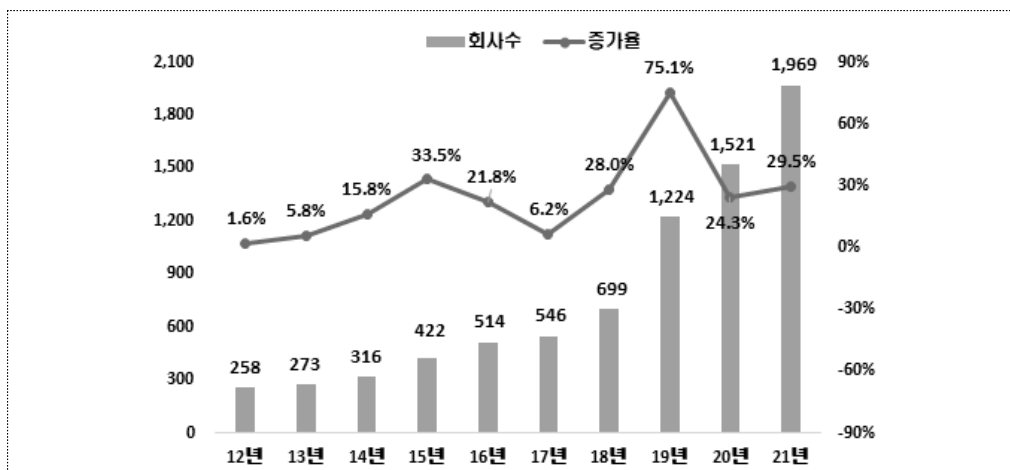
외부감사인 지정비율

(단위:사)

구분 \ 지정연도	2020		2021	
	전체	상장법인	전체	상장법인
지정회사수(A)*	1,521	1,060	1,969	1,256
외부감사 대상회사(B)	31,744	2,382	33,250	2,457
지정비율(A/B)	4.8%	44.5%	5.9%	51.1%

* 지정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예) 2020년(2021년)에 2021(2022)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
인을 지정한 경우 2020년(2021년) 지정회사 수에 포함

최근 10년간 감사인 지정 현황





- (주기적 지정) 상장 593사(유가 265사+코스닥 328사), 비상장 81사 등 674사를 지정하여 전년(462사)보다 212사(45.9%) 증가
 - 2021년 주기적지정 상장사(593사)는 계속지정 416사*와 신규지정 177사를 지정하였고, 2021년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되는 54사에 대해 감사인을 신규로 지정
 - * 2020년 주기적 지정 434사 중 금년 직권지정 사유 발생 등에 따라 분류 조정
- (직권 지정) 상장 663사(유가 185사+코스닥 446사+코넥스 32사), 비상장 632사 등 총 1,295사를 지정하여 전년(1,059사)보다 236사(22.3%) 증가
 - 상장예정법인이 481사로 가장 많고,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266사, 관리종목 164사, 감사인 미선임 89사 등의 順임
 - *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or 부의 영업현금흐름 or 이자보상배율 1미만

지정사유별 지정 현황

(단위:사, %)

지정사유*		지정연도	2020	2021	증감	증감률
주기적지정			462	674	212	45.9
직권 지정	상장예정법인		362	481	119	32.9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245	266	21	8.6
	관리종목		133	164	31	23.3
	감사인 미선임		22	89	67	304.5
	최대주주, 대표이사 변경		75	86	11	14.7
	부채비율 과다		64	53	△11	△17.2
	감리조치		55	42	△13	△23.6
	회사요청		35	38	3	8.6
	선임절차 위반		30	39	9	30.0
	횡령·배임 발생		14	19	5	35.7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8	2	△6	△75.0
	기타		16	14	△2	△12.5
	소계		1,059	1,295	236	22.3
합 계			1,521	1,969	448	29.5

* 지정사유가 중복된 회사의 경우 대표지정사유로 분류

- (회계법인별) 감사인 지정대상 1,969사에 대하여 총 92개 회계법인('20년 75개 회계법인)을 지정
-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이 속한 가군은 716사(36.4%)로 전년(526사, 34.6%) 대비 190사 증가하였으며, 비중은 1.8%p 증가

회계법인별 지정 현황

(단위:사, %)

지정군	2020	2021	증감	증감률
가군(Big4)	526	716	190	36.1
그외	995	1,253	258	25.9
전체	1,521	1,969	448	29.5

참고 - 외부감사 대상 및 감사인 지정사유

- 외부감사대상(외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다음의 사항 중 2개(유한회사: 3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이 50명 이상(유한회사 限)
 -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외부감사 면제대상(외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외감규정 제2조)
 -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 감사인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또는 선임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 －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 －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
 - － 해산, 청산 또는 파산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
 - －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 －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 － 국세청에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회사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 연락두절 등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폐업한 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감사인 지정사유(외감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 감사인 선임기간내 감사인 미선임
-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거나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주권상장법인
- 주채권은행 또는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감사인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을 해임하지 않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선위가 인정한 회사
-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
-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감사보수 미지급·미증액, 감사자료 미제출 또는 감사의견 관련 부당압력 등 사유로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한 회사
- 외감법상 특정 사항을 위반하여 증선위로부터 경고보다 높은 조치를 받은 회사
- 다른 법률(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 요청
- 소속 임직원이 일정금액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공소제기된 주권상장법인
- 지정기초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회사